

지방선거 과열 조짐... 벌써 497명 입건

대검, 전국 공안부장 검사 회의... 선거사범 전담반 비상근무체계 돌입· '가짜뉴스 전담팀' 운영

검찰이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가짜뉴스(fake news)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를 위한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대검은 2일 전국 59개 지검·지청 공안부장검사 등 73명이 참석한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를 열고 제7회 지방선거 사범 수사방안을 논의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지방선거 사범 입건자 수는 497명이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 418명에 비해 18.9%가 증가했다.

이는 허위사실공포와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사범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현 시점 기준으로 거짓말사범이 138명(27.8%), 금품선거가 158명(31.8%)으로 전체 사범의 59.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짓말사범은 같은 기간 6회 지방선거의 60명(14.4%)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다.

대검 관계자는 "특히 거짓말사범 중 선거 관련 가짜뉴스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돼 유권자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며 "경선 이전부터 지역 현안 및 후보자 신상 관련 흑색선전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일선 청에 꾸린 선거사범 전담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거짓말·금품선거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줄세우기' 등 공무원 선거개입을 집중 수사한다. 특히 후보자 신상 관련 '가짜뉴스'에 철저히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가짜뉴스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가짜뉴스 전담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우리 북한에 왔어요" 2일 남측 예술단 일행이 평양방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에 도착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가짜뉴스 전담팀은 대검을 포함해 전국 60개 검찰청의 검사 및 전담수사관 총 124명으로 구성됐다. 일선 검찰청에는 118명이 투입돼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의뢰 사항 및 자체적으로 확인한 가짜뉴스를 수사하고, 대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뢰사항 및 전국적인 사건을 지휘한다. 이와 함께 대검은 디지털포렌식 센터(NDFC), 선관위에 구성된 '흑색·비방선전 TF'와 협업해 가짜뉴스에 신속·전문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검은 NDFC를 통해 각종 디지털증거분석과 계좌·IP 추적 등 과학수사를 총동원해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를 추

적해 구속수할 예정이다. 대검 공안부는 지난달 28일 전국 가짜뉴스 전담팀 화상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제작자·유포자 추적 기법 등 각종 과학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 인터넷 게시물과 국내·외 SNS 계정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 유형별 수사사례·수사기법도 매뉴얼화했다. /뉴스

강성봉,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발의

도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축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성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일 개최하는 제352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축산업은 축산물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발전해 왔으나 기존 공장식 사육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친환경축산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라북도 축산농가는 2017년 기준 전체 11,064호로 전국 6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육두수는 3만 1,860천 두로 전국에서 3위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인증 축산농가는 도내 축산농가의 7.2%로 친환경축산업의 생산기반은 열악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제정 조례안에는 도지사는 친환경축산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으며 친환경축산업육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친환경축산업육성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성봉 의원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성 요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일자리촉 부위원장에 이목희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목희(6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또 김정렬(57)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을 제2차관으로 승진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목희 선임 부위원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김천고등학교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김대중 민주당총재 특보와 노무현 대통령후보 특보를 거쳐 17대 국회에 입성했다.

19대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민주당 원내 전략기획단장,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행정고시 32회이며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도로국장을 거쳐 교통물류실장에 오르는 등 국토부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뉴스

김광수 '거짓말(국회 위증) 처벌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 거짓말 증인, 청문회·특위 종료 이후에도 5년간 고발 가능토록 개정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국회 위증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위증이 밝혀지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 시 갑)은 2일, '세월호 7시간의 위증'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위증이 밝혀지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일명 '거짓말 처벌 강화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28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세월호가 사고 직후부터 침몰할 때까지 1시간 20여분 동안 침실에 머문 채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았고 이후 최순실이 청와대에 방문해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한 뒤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에서 김광수 의원이 지난 2016년 10월 "사라진 7시간이 최순실씨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대단히 강하다"고 질의하자 황 전 총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할 것임이나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힘주어 말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그 시각 최순실은 청와대 관저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음이 밝혀졌다.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관저

옆에 있는 의무실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기존 언론인터뷰를 반복하고, 관저와 500M 떨어진 일반 직원들이 근무하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세월호 당일 박 전 대통령의 관저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조 대위는 이날 오전 10시 41분께 관저에 있던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용 가글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해 일명 '거짓말 처벌 강화법'을 발의했다"며 "거짓말이 진실을 덮고 국정이 농단되는 역사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서 결선투표제 도입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일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경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추미애 대표가 긴급 소집한 최고위에서 광역단체장 경선후보자에 한해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선거 시행세칙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결선투표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해 모든 지역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고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가 과반에 달하지 못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실시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선투표 방법은 본 경선과 동일하다"며 "(본 경선시) 과반에 달하지 못하면 24시간 이내 실시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안심번호 분경선 선거인단을 그대로 결선투표에 적용할지는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조사와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후보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전 경선을 완료한다는 원칙은 이어가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가능한 27일 남북정상회담 전까지는 경선을 끝낼 각오와 의지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시·도지사 경선 중 1회 정책토론회를 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당사 2층 정책토론회가 가능한 '세팅(상황)'이 될 것"이라며 "TV토론은 비용이 발생해 후보자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